

시론



오 주 섭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공동대표

현재진행형인 적반하장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회초리를 든다는 뜻이다. 중국 고전에서 유래한 이 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꾸짖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비유한다. 공동체 윤리를 무너뜨리는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 오랫동안 쓰여온 말이지만, 오늘날의 정치 현실 속에서 이 사자성어는 유감스럽게도 현재진행형이다.
12·3내란 사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12·3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문민통제와 권력 분립을 위협했고, 헌법 위에 군과 권력을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거나 “야당과 언론의 과장”이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헌정 질서를 흔들어 놓고도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꾀변(詭辯)이다.

문화난장



김 종 분
前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작년 겨울은 뜨거웠다.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떠오르게 했고 5·18광주민중항쟁을 소환했다.
‘빛의 혁명’이 진행되는 내내 광주정신은 정치사회 영역뿐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구현됐다. 그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었고, 2000여성들의 참여가 놀라웠다. 이들은 K-POP과 응원봉을 들고 나와 윤석열 탄핵 집회를 촉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이자’, ‘함께하자’, ‘도와달라’는 트윗을 날리면서 남태령과 한남동 집회를 개인에서 연대로 확장시켰다. 개성과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것발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도구이자 대중문화와 정치가 결합하는 접점이었다. 연애인 팬클럽에서 통용되던 선결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집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로 자리잡았다.
2000여성들의 이러한 결집과 참여는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다. 이들은 강남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불의에 항거해본 경험이 있으며, 백래시 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소수자로 몰려 차별과 고립을 겪은 세대다.

취재수첩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해법은 의외로 명료하다. 화려한 구호나 거창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바로 ‘실용주의’와 ‘주민통합’이다.
목표를 비롯한 일부 지역사회는 그동안 반복돼 온 ‘주민 평가르기 행정’에 대한 피로감과 염증이 극에 달해 있다. 선거 과정에서는

적반하장(賊反荷杖)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 역시 다르지 않다. 지도부 인사들은 12·3 사태에 대한 사과나 정치적 단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이미 지난 일”, “대통령의 통치 행위. 선동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표현으로 일축하고 있다. 심지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두고 “정치 보복의 희생자”라는 프레임 앞세우며, 사법 절차 자체를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불을 지른 사람이 화제 원인을 따지는 시민에게 왜 소란을 피우느냐고 되묻는 형국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다 잊는다?
윤상현 의원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다 잊는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러한 인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잠시 분노했다는 이념 있어버릴 존재로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그 반대를 증명해 왔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아픔을, 6월 항쟁의 합성을,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촛불로 광장을 밝힌 시민의 선택을 잊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은 시간이 아니라 시민의 기억 속에서 심판관을 왔다. 만약 국민들이 45년 전,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 추운 겨울날 새벽에 국회를 달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반역의 무리인 전두환 일당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시간이 지나도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역사적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꾀변과 요설로 모면 못해
정치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윤리 위에 서야 한다. 꾀변과 요설로 국면을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신뢰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항아리에 금이 갔는데 겉에 화려한 문양을 덧칠한다고 물이 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수습은 반성과 사과, 그리고 분명한 단절에서 시작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의 선택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집단적 판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적반하장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다시 묻고 다시 기록할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사회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사회. 그것이 민주공화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가 국민들에게 말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양심이 존중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이 이기고 악이 눈 앞에서 패배하는 사회,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결국 ‘얼마만큼 잘사는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바르게 잘사는냐’입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만 민주정치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국민들은 국가 위기 순간마다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이제 정치가 국민들에게 말할 때다.

‘남녀동수원칙’ 헌법에 명시해야

온라인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고 SNS를 활용해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 일에 익숙하다. 비교적 정치의식이 높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여가부 폐지에 반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 더 강력한 성평등정책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2000여성들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공천 확대와 정치 참여 보장이 관건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4개 선거구를 여성 경쟁 전략선거구(여성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여성특구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여성 30% 의무공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적용하는 전략공천 제도 중 하나다. 여성 의원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남성 후보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상대로 남성후보자들이 불공정을 거론하면서 특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후보 선택권이 여성으로만 제한되면 당원 주권주의 기조와 상충되며, 나아가 광주시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헌법에서부터 성평등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하시라. 헌법에 “국민의 대표 구성은 남녀가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원칙을 명시해 성평등을 국가 운영의 기본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기초·광역의회 여성공천 권고조항,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 여성가산점 등 여러 정책이 도입됐지만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은 무너지

지 않았다.
프랑스는 2000년 헌법에 파리티제 원칙을 명문화해 남녀의 공직 접근권을 동등하게 보장했다. 멕시코·캐나다·독일 등도 헌법에 실질적 평등과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며 대표성 격차를 제도적으로 해소해 왔다. 유엔도 2000년까지 남녀동수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각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전부를 여성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그런데 시행 초부터 출수는 여성에게 쏠리는 남성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후퇴했다. 게다가 이 또한 제재규정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여성 30% 공천을 안 한다고 해서 정당에 가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여성후보 30% 공천이 말잔치이자 형식상의 언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전히 유리천정은 단단하다.
전국 시·군·구 226개 지방정부 중 여성 단체장은 7명(3%)이다.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3.4%이고, 광역의회 여성 비율은 여전히 20%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여성위원이 없는 지역도 17곳이나 된다. 여성국회의원은 17%에 불과하고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남성들만의 리그다.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주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전남은 왜 지방정치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고수하는가? 여성들은 더 이상 광장의 소모품이 아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정권교체에 기여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다. 페미니즘 없이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

지방자치 본질은 실용주의와 주민통합

입버릇처럼 통합을 약속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지역사회는 분합되기보다 더 깊게 양분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천명한 실용주의와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이 방향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그대로 투영돼야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현란한 공약이나 정치적 언변이 아니라, 주민을 나누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 즉 ‘불편부당(不偏不黨)’에서 갈린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지난 선거 때 주민통합과 공정 행정을 약속해 놓고도 평가르기와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이권 챙기기 논란,

지키기 어려운 헛공약으로 주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는 인사와 계약, 각종 위원회 구성, 보조금 지급, 산하기관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닌 공정성과 형평성을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지방선거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의 경쟁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은 주민을 품고, 쪼여진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느냐를 가리는 시험대다.
실용주의와 주민통합, 이것은 이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전남 의대 전제 목포·순천대 통합 투표 부결 대략난감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구성원이 전남 최대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에 반대했다. 교육부 심사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와 양 대학은 당혹해하고 있다. 2027년 의대 개교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적 속의의 과정이 부족한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는 국립의대의 신속한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이 회동해 2027학년도를 목표로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는 것은 물론, 동부·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 설치에 뜻을 모았다. 전체 의대 정원 규모를 다루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결정도 금명간 나올 전망으로, 내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두 대학이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틀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연한 통합’을 통해 각 캠퍼스가 현행 체제와 동일하게 독립성·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점도 내세웠으나 뜨거운 찬반 공방 속에 묻히고 말았다. 특히 학생들의 무관심

과 반대가 우세했다. 의대와 무관한 경우, 공공대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내년 1월 중순 교육부 심사 일정에 맞춰 재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동력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대학 간 통합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이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의대는 심각한 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다.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다. 오랜 숙원인 셈이다. 대학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에 앞서 의대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고, 초광역 거점으로 도약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대학에 나란히 선정된 만큼 시너지 효과 또한 상당하다.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혁신 국립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도 연계돼 있다. 의대 설립을 절실히 바라는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다시 한번 꺾이는 것인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극명하게 엇갈린 광주·전남 공공기관 2025년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시가 지난해보다 한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4등급으로 한단계 떨어졌다. 기초자치단체는 보성군과 해남군이 1등급, 광주 북구가 2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과 광산구는 4등급에 포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4등급, 전남도교육청은 한단계 하락한 4등급이다. 최하위 5등급이 없어 사실상 쪼뼛다. 광역의 회에선 전남도의회가 2등급, 광주시의회는 3등급에 자리했고, 기초에선 보성군의회가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전남개발공사가 최고 1등급, 광주도시공사는 3등급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소재 기관별 회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청렴노력도 우수사례로 제시되기도 했다. 공사는 특화 시책으로 개발 인·허가 승인지역에 대한 임직원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 직원 및 직계가족 인적사항을 등록, 토지소유자와 대조해 감출하는 구조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 위한 동행번호사 제도 및 AI 청렴챗봇을 구축하는 행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반해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나란히 하위권에 포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단체는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필수적 기반이지만 양 교육청 모두 시·도민들에게 감사전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올해 종합청렴도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과 공직유관단체 등 5개 유형 모두에서 상승했다. 총 450곳의 평균 점수는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이다. 국민권익위는 금품, 향음, 편의 등 전통적 부패 분야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기관들 역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격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전남 합평군이 두드러진 예다. 더 자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부패 근절과 청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다카시 광장

손을 놓다

하재원

사랑하기에 품었고
더 사랑하기에 스스로를 깨뜨려 놓아주었다
어머니의 허물어진 자리
거기서 비로소 나의 생은 피어났다

※시작 노트
당신의 생을 찢어 문을 만드시고
나를 밀어내던 그 시린 손길에
살은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나의 색깔로
익어갑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을 삼니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부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